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4월 19일(수) 총 8매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 주거복지팀장 신미경 ☎440-4741 • 주무관 이미영 ☎440-474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0시 30분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 마련해 아픔 보듬는다

-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이사비 지원, 청년 피해자에 1년간 월세 지원 -
- 법률지원·심리상담 확대, 단전·단수 유예 조치, 피해 예방도 지원 -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시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4월 19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마련한 추가 지원 방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전부 시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의 청년 비율이 높은 만큼 월세를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씩을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은 현재 238호가 확보된 상태로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도록 조치했으며, 단전은 한전에 유예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5월부터 전세 피해 지원센터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계약 무료 상담, 민간 임대사업자 위반사례 조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공매 중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구사항은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천시에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속칭 ‘건축왕’, ‘빌라왕’ 등이 소유한 주택이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008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유관 기관 등과 전세 사기 피해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31일 개소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원센터에는 4월 17일 현재 총 832명이 2,265건의 법률, 긴급 주거지원, 긴급 금융지원, 피해 접수 등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긴급 주거지원은 4월 17일 기준으로 총 38세대가 신청해 11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27세대는 입주 대기 중이다. 긴급 주거지원은 신청하면 모두 입주가 가능하나, 피해자 대부분은 긴급 금융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시에서는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4월 중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밖에,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비대면 상담 또는 외부 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법률지원의 경우 기준소득 제한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로 인해 인천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도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겠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 30분)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 참고 > 1.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대응상황  
2.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

## <참고 1>

##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대응상황

### □ 속칭 ‘건축왕·빌라왕·청년빌라왕’ 소유 주택 현황

계(호)	강화	옹진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3,008	1	-	4	3	2,523	3	153	112	177	32

※ 해당 소유자 3명 중 1명은 구속 상태, 2명은 사망

### □ 그동안 추진상황

- ‘22. 10.: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계획 수립시행
- ‘22.12.18.: 전세사기 피해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광역시장, 미추홀구청장, HUG, LH, 법률구조공단
- (결과)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저리긴급지원대출

- ‘23. 1.31.: 인천시 전세피해 지원센터 임시 개소(3.13. 정식 개소)
- ‘23. 2. 7.: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협약체결(인천시-iH-LH-HUG)
- ‘23. 3. 9.: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정부발표( ‘23. 3. 10.)
- ‘23. 3. 21.: 전세사기 대응 국토부 주관 지자체 협의회 참석

- (결과) 전세피해지원 정부-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 ‘23. 3. 31.: 피해대책위원회 간담회 참석

- (참석) 김대중 시의원,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주택정책과
- (결과) 국민의힘 차원의 대책마련 요구 등

- ‘23. 4. 17.: 전세피해 대책을 위한 관계기관 긴급현안 회의

- (참석) 인천광역시장, 국토교통부차관, 미추홀구청장, HUG, 경찰청 등
- (결과) 미추홀 전세사기피해자 사망 관련 대책 논의

## □ 지금까지 인천시 피해 지원 현황

### ○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인천시에서 운영)

※ 임시 개소: '23. 1. 31. / 정식 개소 '23. 3. 13.

- (상담인원) 센터장\* 등 7명(市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3명, 법률구조공단 1명)  
\* 센터장: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장 겸임
- (상담내용) 피해지원 대상 선정, 긴급금융지원, 긴급주거지원, 법률상담
- (장소/ 등) 부평 십정동 더샵부평센트럴시티상가 A동 305호 / 운영시간:10:00~17:00
- (상담실적) 총 832명 2,265건 방문상담(법률 641, 금융 477, 주거지원 299, 기타 848)

### ○ 전세 피해 실태조사 실시(인천시 전역)



- 미추홀구 피해 조사현황(2023. 3월말 기준)

구분	세대수(호)	임의경매(호)	매각(호)	비고
미추홀구	2,479	1,523	87	

※ 1차 조사: 2022.11 ~ 2023. 1. 1,802세대(임의경매 1,235/ 매각22)

2차 조사: 2022. 3. ~ 2023. 6. 시 전역 확대 조사

※ 나머지 군·구는 4월한 전수조사 완료 예정

### ○ (긴급주거지원) 경매 낙찰로 퇴거 위기 피해자의 임시거처 제공

- (지원대상) 전세 사기 피해자 중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
- (지원주택) 238호(LH: 226호, IH: 12호) / 신청 세대 38호(입주 11, 입주대기 27)
- (기간/조건) 6개월(최대 2년) / 보증금 면제, 임대료 시세 30%수준, 관리비 자부담

### ○ (법률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 지원

- 전세 사기 피해자일 경우 기준소득 제한 없이 법률구조(소송 지원)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범위 확대 협조 요청 (법무부 검토 중)

### ○ (심리상담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 비대면 상담 및 외부센터 내방 상담

□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
  - 소득 기준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9천만 원 이하)
- (지원 범위) 대출 이자(금리) 전액 지원(2년간)
  - 저리 긴급금융지원\*과 연계해 받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 (전세 피해자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1.2~2.1%
- (지원 세대) 약 3,000세대
- (사 업 비) 60억 원

□ **전세 사기 피해 청년 월세 지원**

- (지원 대상)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만 18~39세 이하 청년
- (지원 범위) 월 40만원 한도 12개월 지원(가구당 최대 480만원)
- (지원 규모) 약 180명
- (사 업 비) 8억 6천만 원(시비)

□ **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 (지원 대상)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
- (지원 범위) 이사비 150만 원(가구당)
- (지원 세대) 약 500세대 \* 4.17일 기준 11세대 입주, 27세대 입주 대기
- (사 업 비) 7억 5천만 원(시비)

## □ 전세 사기 피해 소상공인 지원

- (지원 대상)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 범위) 3천만 원 이내(업체당)
- (지원 내용)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 보증료율 : 연 0.8%
  - 이차보전 : 연 1.5% 지원(3년간)

## □ 기타 지원

- (법률지원 확대) 전문법률상담사(경·공매 전문) 추가 지원(5월)
  -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 지원범위 확대 건의
- (심리상담 지원) 자살예방 프로그램 추가 운영(5월 중)
- (단전·단수 유예) 단수는 즉시 유예 조치(상수도사업본부)
  - 단전 유예는 한전에 협조 요청
- (피해예방 지원)
  - 누구나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 실시
  - 민간 임대사업자 점검 완료(922건 중 위반사례 350건 조사 중)
  -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104개소) 특별점검(5월한)